DJ 서거 1주기 '김대중의 유산' 光州 학술회의

한국·북한·일본 3국 간의 평화 협력 관계 구축이 동북아지역 협력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사상이 세계 정치 질서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기본으로 한 남북 화해가 동북아시아 평화 조성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전남대 5·18연구소와 조선대 민주화 운동연구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추모강연과 주제발표, 토론 등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삶과 사상을 되돌아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12일 무안군 전남도청 앞 중앙공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참석 인사들이 동상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내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 동교동계를 이끌었던 권노갑 전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왼쪽은 후광 김대중 학술상 수상자인 와다 하루끼(가운데) 도쿄대학 교수 부부와 시상자인 김윤수 전남대 총장. /나명주·김진수기자 mjna@kwangju.co.kr

"햇볕정책이 이룬 동북아 안정 흔들리고 있다"

'김대중과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동북아 긴장 완화 北-日 관계개선 우선"

◇추모강연=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화해를 향한 결정적인 전환을 만들었다. 대통령 취임 이래 획기적인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도입해 노력한 끝에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했다. 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큰 의의를 가져다준 사건이다.

'한국과 일본', '남북한', '북한과 일본' 3국간의 평화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청사진이다.

과거 10년간 동북아 평화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에 형성된 남북 협력관계에 의해 보장됐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최근 긴장돼 끝내 초계함인 천안함 사태로 적대적인 관계가 돼 쉽게 개선을 바랄 수 없게 됐다. 현재로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며, 특히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최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공동체로의 전진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10년간 남북 협력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가 보장됐던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중요한 활약상이다.

'김대중의 삶과 사상:평화를 향한 여정'
김성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평화 비전, 전세계 갈등 해소 모델"

◇주제발표1=김대중대통령은 취임 후 햇볕정책으로 북한과 화해, 교류협력의 관계를 적극 추진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역사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햇볕정책은 퇴임 이후 여러 차례 암초에 부딪혔고, 그 결과 북핵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햇볕정책이 더욱 빛나게 됐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대 초부터 주창했던 것이 6자회담의 틀로 이뤄졌다. 김대중대통령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평화적 방법이고, 북핵문제 해결 후에는 이 6자의 틀이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의 평화 비전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아시아와 세계를 향했다. 각국과의 정상 회담이나 여러 세계정상회의 및 국제회의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 수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것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중요한 길임을 역설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 상상력과 종교적 초월성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로 평화 구축의 모델이 됐다. 앞으로도 그의 한반도 평화구축 모델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 곳곳의 갈등과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모범사례로 활용될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문정인 연세대교수

"신 냉전구조 부활…10년 쌓은 기반 위협"

◇주제발표2=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했던 남북 관계가 무너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가 구축됐던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선순환 구조 역시 요동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 지역에 신 냉전구조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진보 10년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해 온 창조적 중도 실용의 외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냥 두면 못 견디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지원과 협상은 없다'는 경직된 발상, 그리고 비공식 대북채널을 거부하고 당국자 회동에만 집착하는 단선적 행보는 실용주의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지적했듯이 대북정책은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그의 비전, 지혜, 유산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력의 강약보다는 주어진 안보환경에 대한 객관적 현실 인식과 평가가 더 중요하며, 나라의 존망은 지도자의 내실있는 정책 운용에 달려있다. 시비를 가리되 현실을 여과없이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지도자는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공무원 채용방식 어떻게 바뀌나

면접만으로 외부전문가 발탁 내년 5급 공채 30여명 줄 듯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채용 방식이 고등고시가 시행된 1949년 이후 61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를 5급 채용 시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발 정원의 50%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채하는 방안이 골자다.

고등고시가 1963년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등으로 나뉘면서 지금의 대규모 공채 시험 방식으로 공무원 채용 구조가 굳어졌으나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개방형 체제로 일대 혁신이 시작된 것이다.

◇'행시' 역사 속으로=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외무고시와 함께 고위 공무원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은 젊은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관문으로 통했다.

그런 만큼 작년 기준으로 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단의 70.6%, 3급 과장급에서는 57.9%를 차지할 정도로 공직 사회의 상위직급은 행시 출신 위주로 채워졌다.

고시 출신이 고위직을 독식하는 느슨한 경쟁 구조 때문에 날로 급변하는 사회에 공직자가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행시라는 이름은 7, 9급 공무원 채용 시험과 달리 5급 선발 시험에만 별도로 사용돼 공직사회 내 특정 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권위적 의미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시라는 이름이 없어지면서 비공식적이지만 공직사회에서 통용된 기수 개념도 깨질 수밖에 없어 기존 '고시파'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민간인 특채 출신과 공채 시험 출신 간 조직 화합 문제도 숙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 '한방'보다 검증된 실력 중요=필기시험 위주의 기존 채용 평가 방식으로는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정부가 내년에는 신규 인원의 30%, 2015년까지는 50%를 일반 공채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 특별채용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민간인은 공직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길이 열린 것이다.

시보 기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면직시키는 등 채용 이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 5급 일반 공채 정원 30명 감소=5급 신규 공무원 정원에서 민간 전문가 수가 단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반적인 공채 시험 합격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행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특채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5급 신규 공무원 정원이 400명으로 이 중 일반 공채가 300명, 특채가 의사와 변호사 등 특수직 30명을 포함해 100명이고, 이런 수요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30% 전문가 특채가 시행되면 일반 공채 인원은 30명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채용 인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뽑게 되면 일반 공채로 뽑는 인원은 지금보다 100명이 줄어든 200명이 된다.

7급 준비생도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대학 추천과 수습을 거쳐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올해 60명 선발했으나 2012년에는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무원 직급별 선발체계 변천

연도	공무원 계급	고등고시(5급)	7급 공채	9급 공채
1949년	1~5급	고등고시	보통고시(공무원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	보통고시 (4급을류)	5급공무원 고시 (5급을류)
1963년		3급 공채시험		
1968년		3급을류공채시험		
1973년		행정고등고시(3급을류)		
1981년	1~9급	행정고등고시(5급)	7급 공채	9급 공채